

(재)부산문화재단 2020-039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2020년 결과보고서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1년의 기록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2020년 결과보고서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1년의 기록

기획·총괄 조 정 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기획 및 편집 원 향 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집필진 이 지 훈(문화정책위원장 / 필로아트랩 대표)
 김 원 명(예술지원정책분과장 /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변 정 희(성평등문화증진분과장 / 여성인권센터 살림 상임대표)
 심 문 섭(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장 / 예술은공유다 대표)
 윤 성 호(사회적가치확산추진분과장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행 지원 김 예 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김 정(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김 가 영(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인턴)

I. 문화정책위원회 소개 및 구성

I. 문화정책위원회 소개 및 구성	1
II. 문화정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4
1. 예술지원정책분과	5
2. 미래문화환경 준비 분과	9
3.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13
4.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16
III. 문화정책위원회 전체 활동	65
1. 문화정책 열린포럼	66
IV. 문화정책위원회의 성과와 전망	81

I. 문화정책위원회 소개 및 구성

1. 문화정책위원회 명단

분과명	구분	이름	소속
	대표위원장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예술지원 정책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원명	경성대 음악학과 교수
	위원	강태훈	동의대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위원	김호진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위원	박형준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위원	이태상	신라대 창조공연예술학부 교수
	위원	진선미	연극인
	위원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위원회	위원장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송교성	플랜비 지식공유 실장
	위원	김동규	나락한알 원장
	위원	백재진	동의대 음악학과 교수
	위원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미래 문화환경 준비 분과위원회	위원장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대표
	위원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위원	이수진	경성대 글로벌학부 교수
	위원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위원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위원	정보경	부산시 청년문화 분과 부위원장
성평등 문화증진 분과위원회	위원장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위원	변현숙	부산민주변호사모임 젠더위원장
	위원	박기영	성평등 예방교육 강사, 목사
	위원	박배일	영화감독
	위원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2. 문화정책위원회 활동 연혁

2019.	7. 16.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발족
	9. 3.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개소 문화정책위원회 1차 전체 회의
	12. 20.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및 문화정책위원회 테이블 토크
2020.	4. 28.	1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5. 15.	1차 성평등문화증진 분과 회의
	5. 18.	1차 미래문화환경준비 분과 회의
	5. 28.	1차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
	6. 15.	2차 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 회의
	6. 17.	2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6. 24.	2차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
	7. 6.	1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7. 13.	3차 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 회의
	7. 22.	3차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
	7. 31.	2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8. 12.	3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9. 23.	2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0. 21.	3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0. 26.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 포럼(성평등문화증진분과)
	10. 28.	부산 문화정책 열린 포럼(정책위원회)
	11. 13.	4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1. 17.	3차 정책위원회 분과장 회의
	12. 22.	4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II. 문화정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II. 문화정책위원회 분과별 활동

1. 예술지원정책분과

집필: 김원명(예술지원정책분과장, 경성대 음악학과 교수)

□ 소속 위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김원명	경성대 음악학과 교수
위원	강태훈	동의대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위원	김호진	부산민예총 사무처장
위원	박형준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위원	이태상	신라대 창조공연예술학부 교수
위원	진선미	연극인
위원	차재근	문화소통단체 슝 대표

□ 2020년 추진 과제

- 2019년 발주, 2020년 2월 발간된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될 예술지원 정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자문

□ 활동 추진 내역

2020.	5. 28.	1차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
	6. 24.	2차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
	7. 22.	3차 예술지원정책분과 회의
	10. 28.	문화정책 열린포럼 토론 참여

1. 1차 회의 요약

- 예술지원 정책분과 사업 추진 논의
 - 주제: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사업 검토
 - 회의 기간: 6, 7, 8월 3차례 회의 개최, 향후 사업 보고서 작성
 - 세미나 방식: 송교성 위원 대표 발제 20분 내외, 위원 검토의견 및 토론 진행

- 기타 논의
 - 근년 정부의 예술지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술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예산에서 예술창작지원과 예술인 복지지원이 양분되면서 예산 배분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원에 있어서 예술창작과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2차 회의 요약

- 예술 장르 통합과 관련한 논의
 - 기존 9개 장르를 3개 장르로 총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 장르 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 특히 심사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할 구체적이고 면밀한 방안이 필요
 - 지원사업의 방향이 기능이 아닌 목적 중심으로 가는 부분은 긍정적 변화이나 질적 성취와 관련한 시민들의 만족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소액다건 지원과 다액소건 지원과 관련한 논의
 - 연구용역 보고서는 기초예술의 가장 큰 목적을 예술적 수월성 달성으로 설정하여 다액소건 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지역에 관심이 있거나 시민들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 영역은 소액다건 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다액소건 지원방식의 궁극적 지향점인 예술적 수월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평가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함. 심도 있는 컨설팅이나 비평, 담론의 장을 제공해야 함
- 책임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논의
 - 책임심의회란 사전에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최초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컨설팅한다는 것임. 특정 예술단체의 예술적 성취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예술적 성취를 평가하는 방식
 - 기초예술 분야에 바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브랜드 사업에 우선 적용해본 후 예술가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 시행되어야 함
- 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유통 및 홍보 지원 논의
 - 부산문화재단은 7~8년 전부터 오프라인 홍보 플랫폼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지만 예산을 받지 못했으며, 재단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여러 플랫폼들이 부산시 e-문화파크로 수렴이 된 상태임
- 장르 통합에 따른 심의 과정 등의 문제 논의
 - 장르 통합은 심사의 통합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실제로 다른 지역 재단에서도 장르 통합을 하더라도 심의는 여전히 장르별로 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여러 장르에 걸치는 작품의 경우 어디서 심사를 할 것인지의 문제도 발생함
 - 장르 세분화로 인해 지원금 규모가 과소하게 되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르 이기주의는 사업 목적 중심의 심의를 함으로써 해결의 가능성이 있음

3.3차 회의 요약

- 예술 장르 통합과 관련한 2차 논의
 - 개인 지원과 단체 지원 부분, 삭제나 신규 생성되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 창작 단계별 지원 체계 논의
- 심의위원회에 따른 심의 과정 및 체계 개선의 문제
 -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공정성을 띄는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선정이 되도록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음
 - 심의위원이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심의를 함으로써 지원자 및 탈락자들의 집단 저항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심의를 통해 개선지점을 알 수 있도록 심의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심의의 충실성이 필요함
 - 재단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적인 심의를 하고 최종 발표 전에 자문위원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재단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
- 지원 사업의 다변화에 관한 논의
 -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형태 지원 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유통 단계에 대한 지원 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
 - 브랜드 콘텐츠의 경우 지역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창작과 유통지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브랜드를 쉽게 만들기 어려움
 - 브랜드콘텐츠가 될 만한 작품은 노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재공연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연작품 중에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음
- 심의위원 선정 문제
 - 심의위원의 필터링과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에는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자체를 심의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가 있음
 - 한 사람의 개인적인 편견,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

□ 성과와 한계

- 장르 통합의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함. 장르 간의 벽을 허물게 되면 각 장르에 속해있던 예술인들이 서로 타 장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교류가 되며 자극제가 될 수 있으며, 지원 단계에서 애매하게 두 세 장르 걸친 작품들이 어디에 지원하지 모르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다만 통합된 장르에 대한 예산 배분 단계 및 심의 단계에서는 현실적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음. 일단 장르 통합을 시행한 후 문제점이 노출되면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임.
- 심의 체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건별 심의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여 최초 심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컨설팅하는 이른바 책임심의회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특정 예술단체의 예술적 성취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예술적 성취를 평가하는 방식임. 다만 기초예술 분야에 바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브랜드 사업에 우선 적용해본 후 예술가들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심의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띄는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선정이 되도록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음. 심의 위원이 지극히 개인적,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심의를 함으로써 지원자 및 탈락자들의 집단 저항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지원사업의 다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창작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브랜드 콘텐츠의 경우 창작과 유통지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기존 작품 중에서 재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음.

▪ 활동 사진



[그림 1] 예술지원분과 1차 회의(2020.5.28.)



[그림 2] 예술지원분과 2차 회의(2020.6.24.)



[그림 3] 예술지원분과 3차 회의(2020.7.22.)

2. 미래문화환경 준비 분과

집필 : 심문섭(미래문화환경준비 분과장, 예술은 공유다 대표)

□ 분과 구성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심문섭	예술은공유다 대표
위원	우신구	부산대 건축학과 교수
위원	이수진	경성대 글로벌학부 교수
위원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위원	장현정	호밀밭출판사 대표
위원	정보경	부산시 청년문화분과 부위원장

□ 2020년 추진 과제

- 부산 문화예술계 포스트 코로나 방향성 제안 논의

: 코로나 시대에 예술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솔루션 제안
 위원 참여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여 집단적 토론 확산
 향후 전체 포럼 개최 시 발제 내용으로 활용 예정

□ 활동 추진 내역

2020.	5. 28.	1차 미래문화환경준비 분과 회의
	6. 15.	2차 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 회의
	7. 13.	3차 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 회의
	10. 28.	문화정책 열린포럼 토론 참여

1. 1차 회의 요약

- 프로젝트 추진 관련 논의: 위원별 주제를 선정하여 소규모 세미나로 진행 예정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특징 논의
 - 공간의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밀집이 아닌 분산과 거리의 강조
 - 생명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강조
 - 온라인 매체의 급부상: 유튜브, 줌 등 온라인 매체 활용 강화, 온라인 비대면 수업 문화 안착, 시공간 인식의 변화
 - 환경 변화에 따른 대면 예술의 위기
 -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 강조

2. 2차 회의 요약

- 코로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일시적인 위기에서 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필요
 - 변화하는 위기에 예술가들의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공연예술의 위기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함.
-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대응에 대한 제안 소개
 - 비대면 예술에 맞는 다양한 스킬들이 요구됨. 창작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새로운 형식이 필요함. 공연 예술의 온라인 상영 등이 부산지역에서는 아직 미진함.
 - 기획자의 역할 강조: 창작된 작품을 어떻게 가공하여 유통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인문적 사고에 토대를 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함
 - 트랜스 미디어의 강조: 기획단계에서부터 유통방법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작품의 다방면 활용이 필요함.
 - 온라인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의 문제들,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함.
 - 문화재단도 에이전시의 역할,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부산지역의 문화회관들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함.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 문화기관들의 역할론 제기
 - 생활예술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예술적 태도를 도입하는 관점이 필요함. 생활과 연계된 예술활동의 활성화 필요
 - 비대면 예술활동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일대일 연결로의 변화의 시작점.
 - 예술지원사업의 다변화: 전통적인 지원방식을 벗어나는 사업이 필요함. 유통단계에서의 비평활성화라거나, 자율적 아이디어 제안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필요함. 다양한 정보의 큐레이팅의 필요성 강조.

3. 3차 회의 요약

-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의 대응에 대한 제안 소개
 - 온라인 상의 예술활동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 제안해야 함.
 - 현재는 시장경제에서 공유경제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 1인 경제의 시대가 되고 있음. 홀로 향유하는 문화가 늘고 있고,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
 - 생활의 플랫폼도 밀집시설보다는 온라인 쇼핑 등 사회적 삶에서 개인적 삶으로 삶의 형식이 변화하고 있음.

- 그리고 점점 생활권 주변의 구매 패턴이 늘고 있고, 집 주변으로 삶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음.
- 이제는 이런 삶의 패턴에 문화예술이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과제임. 예를 들어 도보권 내 공원을 어떻게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근거리 문화상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보와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됨. 정보와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문화재단이 조성해야 함.
- 코로나로 인해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고 있음.
- 온라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더욱 발전하고, 오프라인은 소규모가 주류를 이루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영상을 콘텐츠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구조를 넘어 부산의 다양한 영상관련 기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또한 새로운 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연구와 스터디 지원사업들도 필요함.

□ 성과와 한계

정책위원회 미래문화환경 준비분과는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둔 문화예술계의 대응과 흐름, 그리고 대안 등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코로나 재난 속 위원회활동은 문화예술계의 한계와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대면방식의 문화예술활동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활동이 위축된 것처럼, 사람들의 일상은 사회, 경제, 정치, 환경, 문화를 구분할 것 없이 동일한 영향을 받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확인 하는 시간이었다.

때문에 미래문화분과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처럼,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위축은 경제의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의 위축은 문화 활동을 축소시키고, 정치적 해결을 원하지만 기존 질서 속에 수립된 정치의 영향이 코로나의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인식 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음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일상이 과연 예전과 동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반강제적인 경험을 공유한 코로나 시대의 문화 예술은 이정표 없는 길을 한걸음 나아가야하는 순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과 시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 지구적 난제를 지구 반대편 문화예술인들과도 함께 맞이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고민과 실천을 공유할 수 있는 현재에 살아가고 있음은 또 다른 기회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었다.

코로나로부터 스스로와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음에도 예술가는 창작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꾸준히 문화예술을 또 다른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속담처럼 우리 모두는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루하루 삶의 이유를 발견해 내고 있는 것이다.

‘대면과 비대면’처럼 구분되던 말들은 ‘온택트’라는 말처럼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의 말과 인식은 더욱 세밀 해지고 행동은 그 인식을 따르고 있다.

미래문화분과위는 문화예술전반에 걸친 3차례의 회의와 발제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세밀한 변화의 지점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건축, 글로벌에서 지역화로, 기술을 통한 세계화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탈경계와 초연결을 통한 시간과 공간개념의 변화까지도 논의의 중심이었다.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고 다시 새로운 솔루션을 모색하는 짧은 시간이 다수 두서없이 전개된 한계는 명백하다. 그러나 적어도 재단과 민간의 위원들이 시대의 지역의 위기를 읽어내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의 자리를 개최한 시도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집단지성의 장이 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해본다.

▪ 활동 사진



[그림 4] 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 2차 회의



[그림 5] 미래문화환경준비분과 3차 회의

3. 사회적 가치 확산 추진 분과

집필: 윤성호(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장)

□ 소속 위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윤성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송교성	플랜비 지식공유 실장
위원	김동규	나락한알 원장
위원	백재진	동의대 음악학과 교수
위원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 2020년 추진 과제

-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사례연구”
: 문화예술의 사회적가치 확산에 대한 논의 토대 마련

□ 활동 추진 내역

2020.	7. 6.	1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9. 23.	2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0. 21.	3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0. 28.	문화정책 열린포럼 토론 참여
	11. 13.	4차 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회의

1. 1차 회의 요약

-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개념화나 지표 필요
- 지역사회 케어(노인·장애인 탈 시설화) 관련해 예술 활동 필요성 증대
- 다만, 예술이 소모적으로만 활용되는 경우 많아 제도개선 활동 등 필요
- 타 분야와 견해 인식 차이는 만나면서 상호 보완 될 수 있음
- 영역 간 융합 사고 외에도 대상자 중심 사고의 필요

2. 2차 회의 요약

- 1) 문화예술의 사회적 영향 유형화에 대한 전반적 논의

2) 사회적가치 확산 분과 위원회 향후 과제 논의

- 부산문화재단 유형화 분류 작업
 - 사회적 가치실현 분과위원들과 논의를 통한 유형화 작업
- 유형화에 근거한 국내외 주요 사례 조사
 - 유형화 조사양식 마련(부산문화재단)
 - 분과 위원별 5개 사례 조사
- 부산 사례 조사
 - 유형화 분류에 따른 대표적인 사업 조사(분과위원)
- 정책 시사점 제시
 - 향후 과제로 [부산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 확산 가이드라인(guideline) 및 툴 킷(toolkit)] 제시

3. 3차 회의 요약

1) 사회적가치 확산분과 위원회 사례 보고 및 논의

- 사례보고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 범천2동 육아맘 공동체 ‘모모드림’(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 예술가와 함께 떠나는 ‘마음휴가’:Boomvill(부산문화재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 다대5지구 BMC 마을벽화조성사업(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더청연 등)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굿모닝!예술인>‘만덕천(만덕종합사회복지관, 부산문화재단)
 - 장애인의 예술표현을 「아트시장」에 묻는다: 障がい者の芸術表現を「アート市場」に問う(社会福祉法人 素王会, 사회복지법인 소오우카이)
 -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터,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 다큐멘터리 창작공동체 오지필름
 -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 초록영화제
 - 영화문화협동조합 씨네포크
 - 미디토리협동조합
 - ‘망미골목 아름다운 이웃’ 커뮤니티조성(비온후)
 -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신진문화예술행동 흥, 아름다운재단)
 - 비영리 시각예술전시공간(공간 힘 space heem)
 - 신나는 예술여행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실 씨 Lab C)
 - “Gachi Beach Combing 같이·가치 비치코밍”(Gachi 예술운동)
 -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
- 논의
 - 사회적문제에 대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문화예술 사례 정리 필요.
 - 사회적문제 카테고리 구성을 위해 타 연구기관(부산복지개발원 등)과 협력 요구.

- 사례연구는 2021년 2월까지 정리하고, 향후 후속 보완 연구과제를 진행하고자 함.
- 향후 과제로 [부산 문화예술 사회적 영향 확산 가이드라인(guideline) 및 툴 킷(toolkit)] 제시

□ 성과와 한계

- 성과
 - 문화예술활동과 사회적가치의 관련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수행함.
 - 사회적가치확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사례를 기초적으로 점검하여 실체화시킴.
 - 국내외 사례를 파악하고, 기초문헌을 검토함.
 - 사회적가치확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사례를 체계화하기 위해 사회적문제의 카테고리 설정을 시도함.
 - 국내외 사례를 체계화하여 분석·논의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가치확산에 대한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
 -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툴킷을 마련하고자 함.
- 한계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문화예술분야에 이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문화예술활동의 도구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활동성과에 대한 포럼 등의 논의구조가 필요했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일정을 잡지 못함.
- 활동 사진



사회적가치확산분과 2차 회의



사회적가치확산분과 3차 회의



사회적가치확산분과 4차 회의

4. 성평등 문화 증진 분과

집필: 변정희(성평등문화증진분과 위원장,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 분과 구성원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변정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위원	변현숙	부산민주변호사모임 젠더위원장
위원	박기영	성평등 예방교육 강사, 목사
위원	박배일	독립영화협회 성평등 환경 지원
위원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대표

□ 2020년 추진 과제

- (1)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증진 활동 이행 점검
- (2)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센터의 안정적 운영
- (3)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 포럼 개최
- (4) 부산 문화예술계 폭력 차별 금지 자치 규약(부산판 CTS) 마련

□ 활동 추진 내역

2020. 5. 15.	1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6. 17.	2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8. 12.	3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10. 26.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 포럼(성평등문화증진분과)
12. 22.	4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1)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증진 활동 이행 점검

- 성평등문화증진분과회의(4회 실시)
-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면담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 포럼 시 이행 점검 사항 발표

(2)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방센터의 안정적 운영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면담
-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참여

(3)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확산 포럼 개최

- 포럼명: 미투에서 성평등까지 - 부산 문화예술계의 과제와 전망
- 일시 및 장소: 2020.10.26.(월) 14:00~16: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 주최 및 주관: 부산문화재단,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디자인자리
- 주요 내용: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실천 방안 논의

시간	세부 내용
13:50~14:00 (10분)	[접수 및 사회] 사회: 변정희(문화정책위원회 성평등문화증진분과장)
14:00~14:05 (10분)	[인사말] 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14:05~14:25 (20분)	[발제 1]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
14:25~14:45 (20분)	[발제 2]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14:45~15:35 (50분)	[종합토론] · 좌장: 이지훈(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1.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제안(주유신 영화진흥위원회 성평등위원, 영산대 교수) 2.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김부민 부산광역시 의원) 3.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제정의 필요성(변현숙 변호사,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성평등문화증진분과 위원) 4.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이미연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15:35~15:55 (20분)	[열린 토론] 청중 참여 질의
15:55~16:00 (5분)	[폐회]

(4) 부산 문화예술계 폭력 차별 금지 자치 규약(부산판 CTS) 마련

- 부산문화재단의 2020년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인 성평등 <셰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
- 부산 연극계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 환경을 위하여 예술인이 직접 만들고 실천해가는 변화 시도.

□ 성과와 한계

(1) 성과

①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문화증진 이행 점검

부산문화재단은 2019년 문화예술계 성평등 증진 사항으로 문화예술 성평등 자문위 구성, 심사, 자문위원 임명시 여성비율 할당 제고, 문화예술 사업 교부 및 계약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반영, 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리 기준 마련, 부산 예술계 ‘폭력·차별 금지 규약’ 자치 규약 마련, 성평등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및 부산 문화정책 성별 영향평가·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여성 예술인과 문화기획자의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젝트 지원,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 실효성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등을 계획하였고, 성평등 정책 분과가 마련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었다.

2020년 성평등 정책 분과 활동은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문화증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로 성평등 문화정책 토론회 및 성평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발한 논의를 펼칠 수 있었다.

② 문화예술계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을 시의적절하게 개최함으로써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포럼에는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와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공동대표이자 성평등분과위원의 발제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유신 교수,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김부민 의원, 성평등분과위원인 변현숙 변호사,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생활문화본부장의 토론으로 예술인 당사자를 비롯하여 연구, 정책, 행정, 조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코로나 시국에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토론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③ 부산 문화예술계 폭력 차별 금지 자치 규약 마련 - 세이프 온 스테이지(Safe On Stage)

성평등분과 자체 추진사업은 아니었지만 2020년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는 부산 문화예술계 폭력 차별 금지 자치 규약 마련을 위한 첫 걸음으로 자리매김했다. 안전하고 평등한 부산연극계 창작 환경을 위한 자치 규약 세이프 온 스테이지는 예술인들이 자신이 속한 창작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고민을 모았고,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을 위한 권리 선언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한계

① 성평등 문화증진 이행사항 점검 구체화 필요

2019년도 재단의 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면서 성평등 문화 증진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던 점이 아쉽다.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비율, 예산 배분 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내규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며, 성평등 분과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② 성별영향 평가 등 예산 및 재단의 성평등한 운영과 관련하여 규약 및 조례 검토 필요

성평등을 조직의 비전이자 경영 방침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추진 및 성평등 문화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이 필요함에도 올해 추진되지 못하여 아쉽다.

또한 부산문화재단 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에 대응 체계 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해결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내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탄탄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체계 안정화 및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 제정 필요성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체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토론회 등을 통하여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조성할 수 있는 추진 체계 마련 및 조례 제정을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활동 사진



1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2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4차 성평등문화증진분과 회의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포럼 포스터 이미지

4-1.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포럼

- 일시 및 장소 : 2020. 10. 26.(월) 14:00~16: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 내용
 - 부산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현황 공유 및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필요성 논의
 - 부산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제안
 - 발제 1 : 부산 문화예술계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 발제 2 :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 종합토론 : 정책제안, 조례제정, 시의회의 역할, 재단의 과제 등

[발제문 2]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부산문화예술계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연대 송진희

2016년 00계_내_성폭력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sns 중심으로 고발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 예술인들의 인권 보호되지 않는 사각지대
- 지역의 폐쇄적인 문화예술계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지역문화예술계 말할 수 없는 분위기



2018년 미투운동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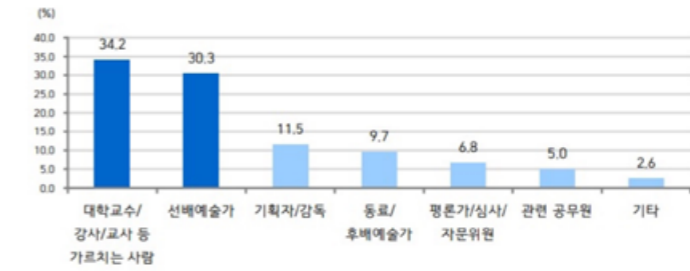


문화예술계의 구조적문제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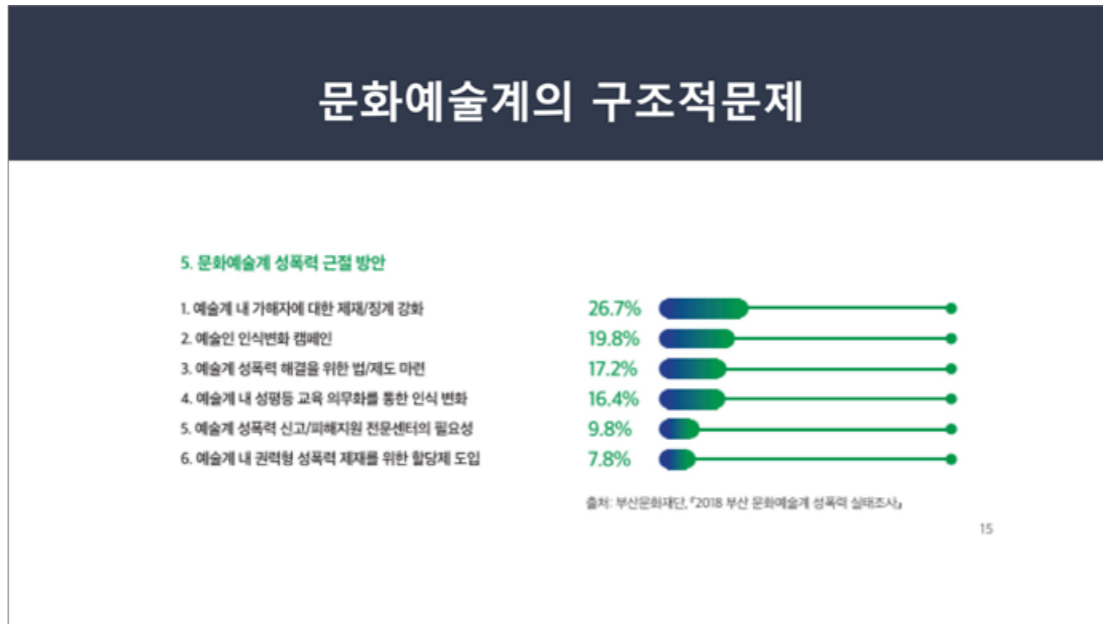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수 : 219명, 보기 제시, 중복응답 기준(100% 환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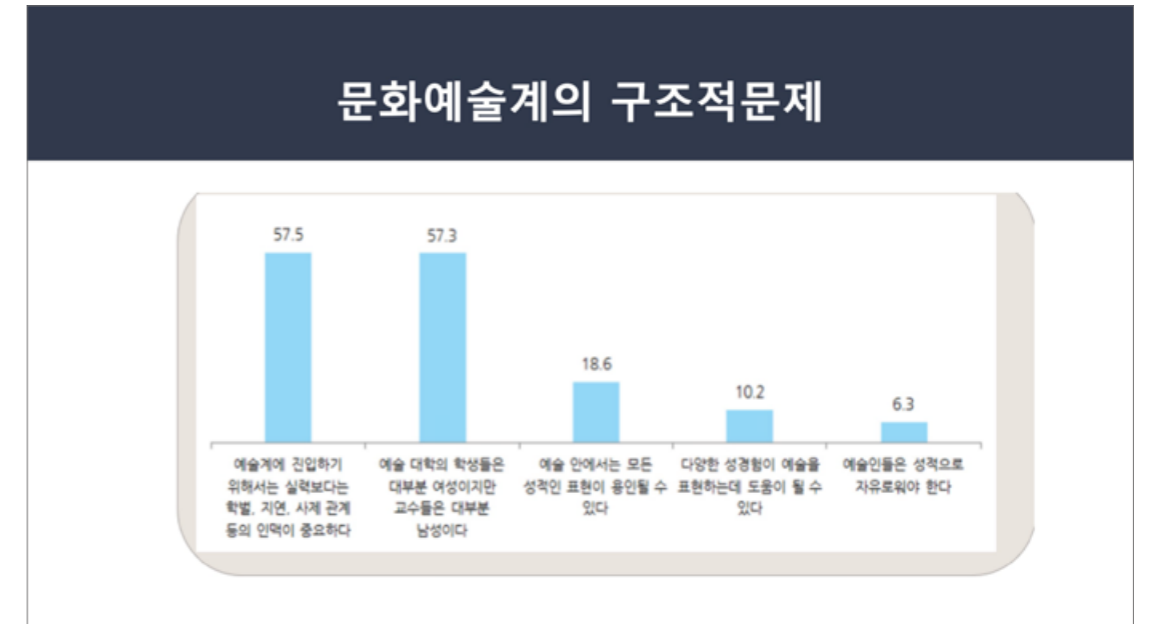
문화예술계의 구조적문제





문화예술계의 구조적문제

예술계 프리랜서 72%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특별조사단 권고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전담 기구설치
- 예술가의 지위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 공적지원배제
-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의무화

부산문화예술계 미투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051-558-8858
특별 대응센터**

대상 문화예술계 종사자, 예술계 예비자 및
문화예술계에서 피해를 입은 분

기간 2018년 7월 2일-10월 30일 (4개월)

시간 10시-18시 (월~금)

전화 051-558-8858
온라인신고: 페이스북@BASRCS

내용 상담, 법적, 의료 지원 대응지원

이제 우리가 함께 대응합니다

주최: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부산 문화예술계 대응센터 피해 상담

4개월 임시운영 **1000회** 이상의 상담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워크숍

#00개 내 성폭력 발원으로부터 #MeToo 운동까지 피해자들은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계가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술인의 인권과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문화예술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성폭력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대상: 문화예술계 특성직업종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경험 경력 3년 이상인 분이나 양방향 성폭력 전문강사인 분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
- ◆ 모집인원: 20명
- ◆ 교육일시: 2019.9.23. 13시-18시
- ◆ 장 소: 시/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
- ◆ 참가신청: 전화문의 051.558.8858 / 051.558.8833

개단: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기록하는 목소리

2019.12.16

문화예술계 #metoo

소민아트센터 4-6시

시/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예방센터의 현주소

2018년 4개월 임시 운영 후 중단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운영 후 중단

2020년 상반기 운영 후 중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 2030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성차별 없는 문화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성평등한 문화실현의 비전을 만들자"

대표 과제

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목표	추진 방향(안)
평등한 기회	① 문화예술계 생산 통계 전체의 성별 데이터 포함 ② 문화예술계 생태계에 맞는 적극적 고용 및 적극적 참여 개선 ③ 문화예술계 공공/민간 성평등고용 및 임금 공시제 도입 ④ 문화예술계 경력단절 남녀 대상 집중지원
평등한 인권	문화예술계 상인지 감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공공 부문 상인지 향상교육 개발 및 컨설팅 운영 ② 문화예술인 성평등교육 실시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②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속
평등한 권리	문화예술계 여성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단체, 위원회의 여성대표성 제고 ② 문화예술계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성평등한 문화정책을 위한 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예술 성평등 옴부즈맨제도 추진 ② 문세부+지역정부 문화예술 공공기관 성평등협력네트워크 구축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위 "문화예술계 성폭력 등 피해자 구제 전담기구 만들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



[발제문 2]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WACA)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WACA)

목차

- I.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필요성
- II.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 III. 성평등 문화예술 지원정책 해외사례
-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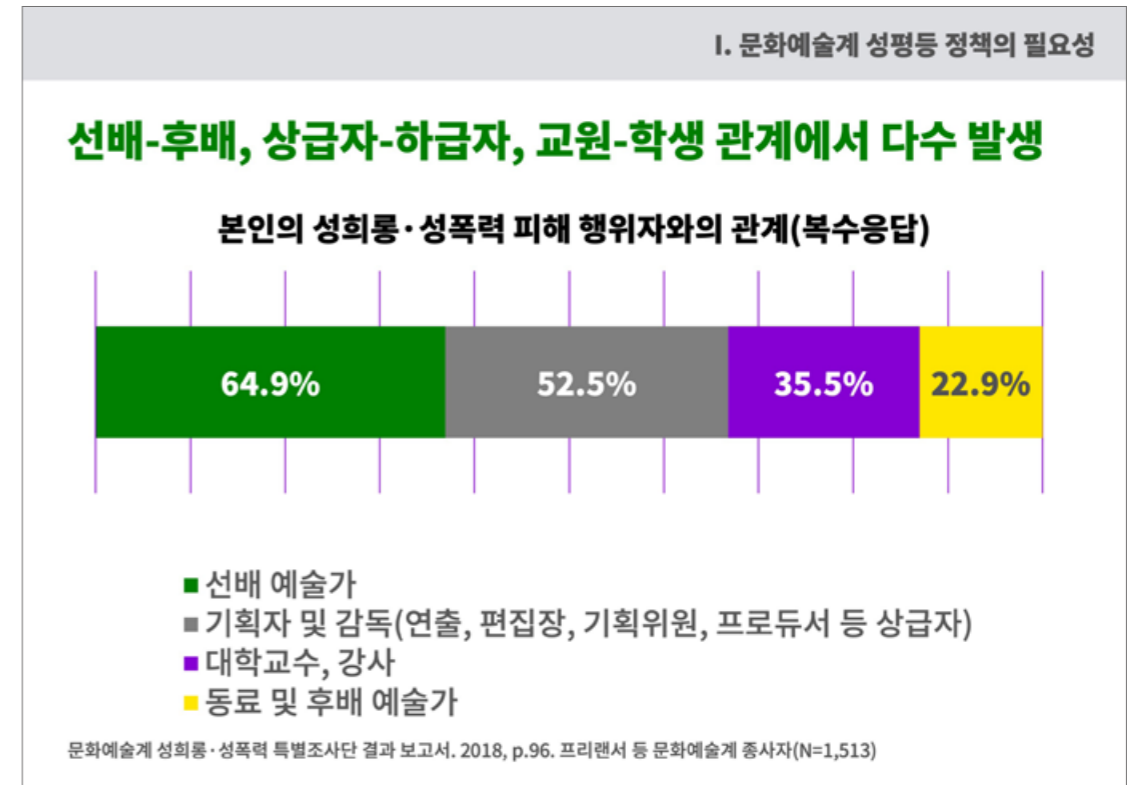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I. 문화재단에 성인지 관점이 왜 필요한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제기한 문제들

1. 예술계 내부의 권력구조 가시화
2. 해결주체로서 OO계라는 공동체 호출
3. 프리랜서라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
4. 공공 예술정책의 역할 제시
5. 문화 콘텐츠 생산자로서 성평등 의식의 중요성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가해자는 누구인가? '선배 예술가'

문화예술계 내 우월적 지위
공동체의 신뢰와 권력 획득

↓

피해자의 평판, 예술 활동의 기회, 인력 선발에 영향

↓

거절이나 항의 의사를 표하기 불가능,
피해 경험을 드러내는 적극적 대처가 어려움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문화예술계:성폭력 방지정책의 사각지대

- 성폭력 방지정책이 정부 및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 **조직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프리랜서 비율 70%** 이상인 문화예술계는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정책, 성희롱 규제 및 징계제도 등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
- 예술계 활동방식의 다양함으로 인해 예술계 위력 증명의 어려움
- 문화예술 작품과 콘텐츠를 생산하고 발표, 유통하는 영역으로서 문화예술계 성평등 관점의 중요성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문체부 성폭력 방지정책 시행 (2018~)

1. 문화예술계 성폭력 성차별 실태조사
2. 예방: 문화예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예방교육 의무화, 강사양성, 교육 콘텐츠 개발)
3. 예방: 표준계약서 성폭력 방지조항
4. 예방: 지원사업 참여시 서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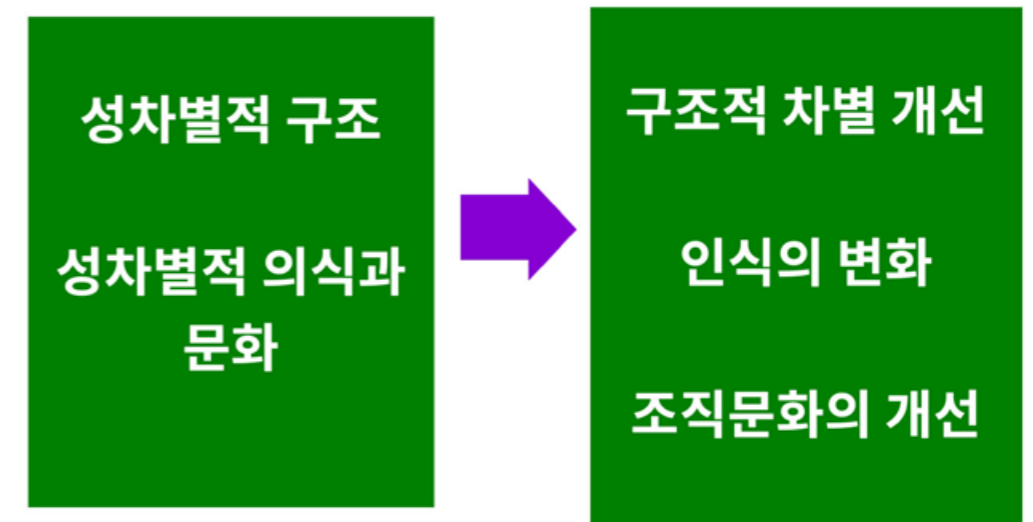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문체부 성폭력 방지정책 시행

5. 피해자 지원: 문화예술계 전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센터 (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6. 사건해결: 국고지원사업 참여 중단, 심사위원 배제
7. 사건해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8. 전담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제 신설 (기획조정실)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폭력 발생의 원인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평등 문화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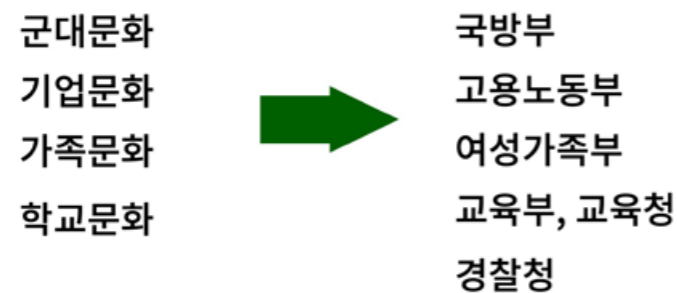
- 첫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평등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 둘째, 문화예술 콘텐츠, 행사, 사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평등문화정책의 문화란?

- 논의 범위

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성평등문화정책 : 문화분야 성평등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종사자 및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생태계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과 향유의 과정 및 결과를 포괄한다.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 채택
- 모든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 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합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함
- **제도와 문화의 변화, 조직 재구조화, 자원의 재분배 등 전반적 변화 중시**

김양희 외,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한국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제도’, ‘성인지 통계 구축’, 정부 및 주요 조직과 위원회 등 의사결정구조에서 성별 대표성 제고
- 정책 시행이 정량적으로 정형화되는 한계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제도와 문화의 변화, 조직 재구조화, 자원의 재분배**
→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구축된 문화예술 조직, 의사결정구조, 평가방식, 예술활동의 구조 등의 재구조화
- **성 주류화 정책으로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 성폭력 방지정책을 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정책 설계 및 평가 필요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특수한 조건

1. 예술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의 여성 비율 높음
2. 프리랜서라는 활동조건으로 인해 사적,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큼
3.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음

참조: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여성의 과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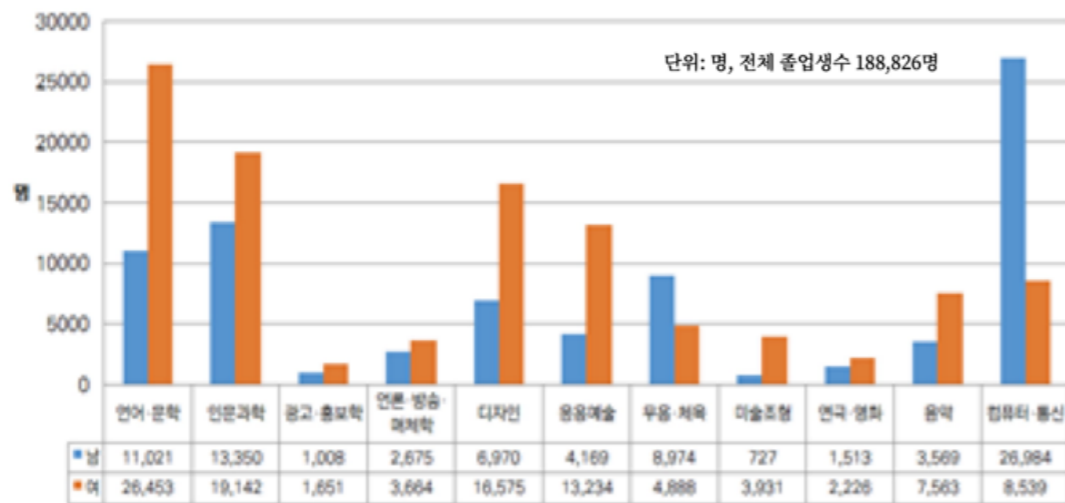
예술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의 여성 비율이 더 높은 데 비해,

1) 대학 교원 성비 역전

2) 직업적 예술계 진입(데뷔) 성비 및 예술공공지원 선정자 성비 역전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체육 관련 세부전공별 졸업생 성별 분포 (2018)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 참고 재구성,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 재인용.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대학 계열별 성별 전임/비전임별 교원 수 및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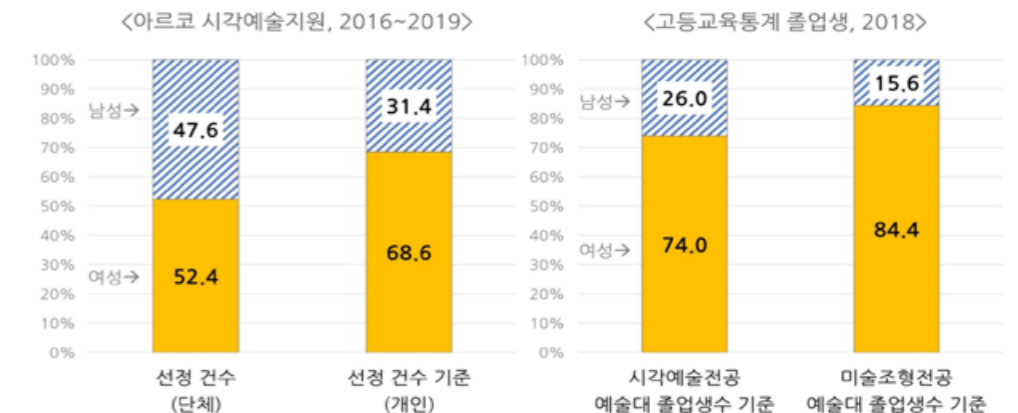
		교원 수 (단위: 명)			성별 비율 (단위:%)	
		전체	남	여	남	여
전체	전임	66,863	51,207	15,656	76.6	23.4
	비전임	81,953	48,481	33,472	59.2	40.8
인문	전임	10,096	6,849	3,247	67.8	32.2
	비전임	16,777	8,406	8,371	50.1	49.9
공학	전임	14,758	13,932	826	94.4	5.6
	비전임	11,108	9,282	1,826	83.6	16.4
의약	전임	13,973	9,601	4,372	68.7	31.3
	비전임	7,942	4,224	3,718	53.2	46.8
예체능	전임	5,107	3,270	1,837	64.0	36.0
	비전임	16,709	8,073	8,636	48.3	51.7

교육부·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2018. 자료 재구성, 이미정 외,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대학생의 성폭력 피해현황과 향후 대응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아르코시각예술지원에 대한 이해 |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의 연도별 변화 | 아르코 시각예술지원의 성평등 팩트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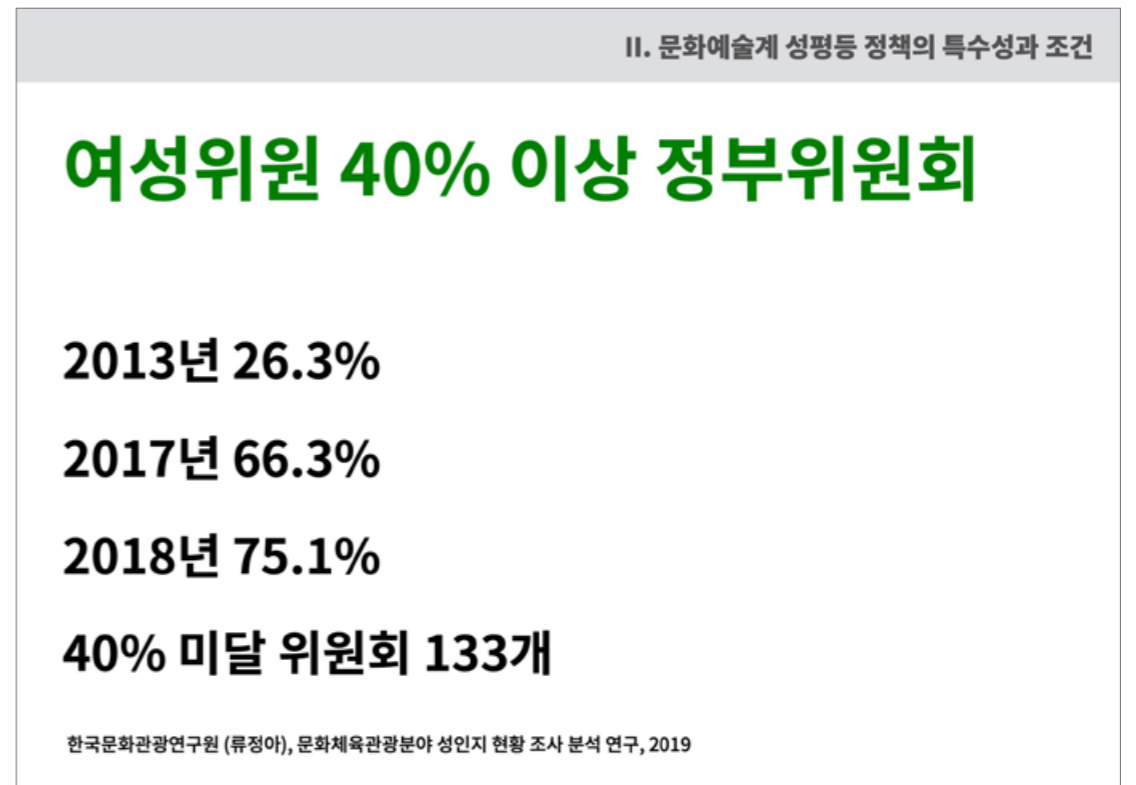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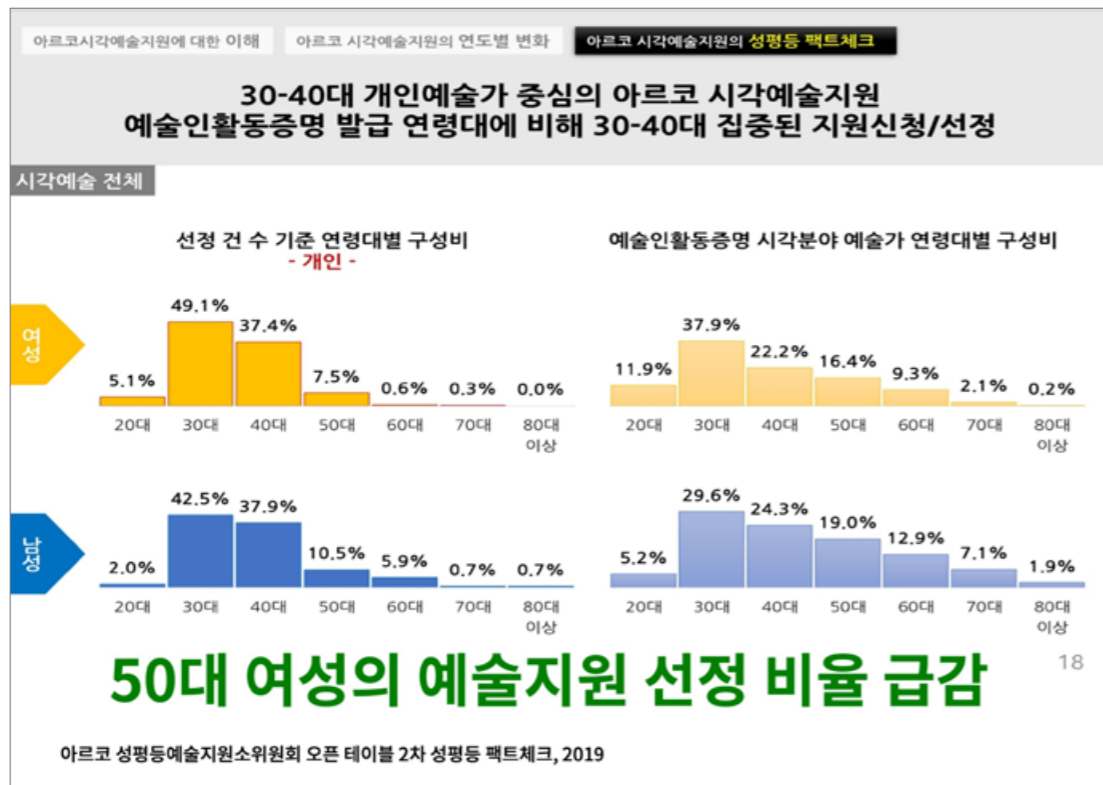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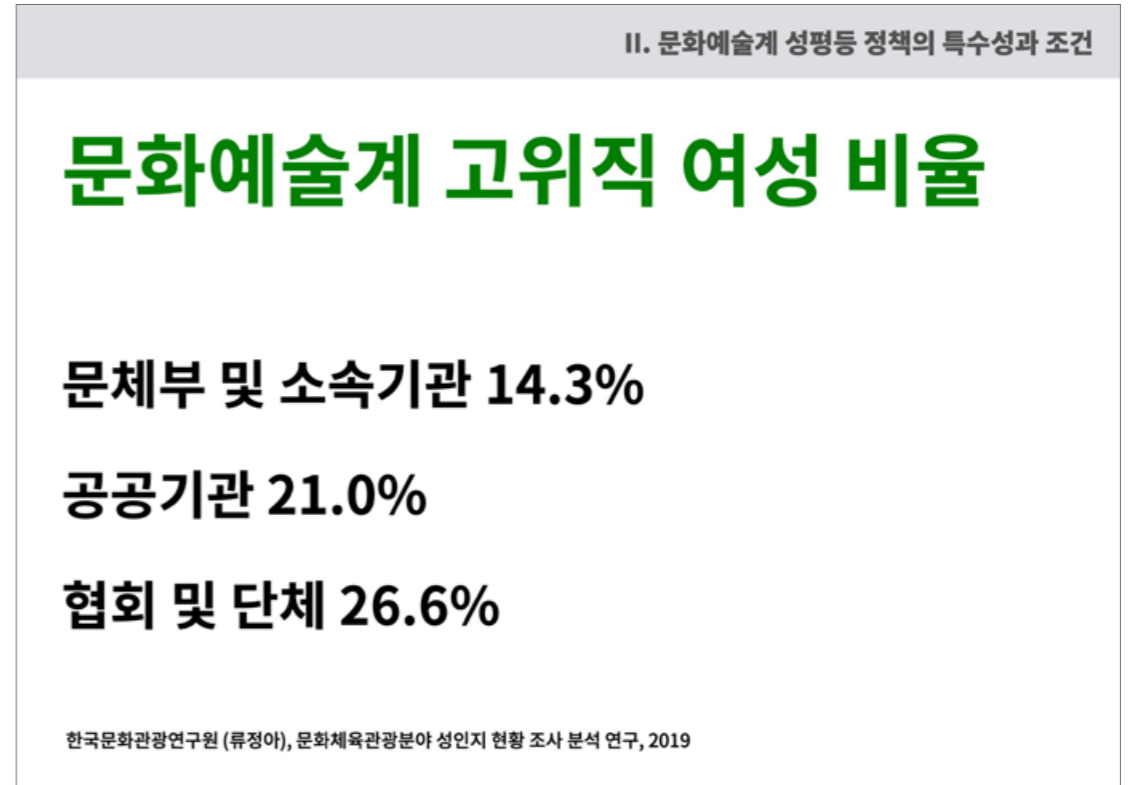
시각예술지원을 받는 여성예술가가 남성보다 많지만, 실제 균형과 맞지 않음
미술/조형 전공자의 성비로 보면 최대 30%p차이까지 벌어짐

시각예술 전체



고등교육통계, 시각분야 졸업생 성비 (2018)		남성	여성
디자인	디자인일반,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	29.6%	70.4%
응용예술	사진, 만화, 영상예술, 뷰티아트	24.0%	76.0%
미술조형	순수미술, 응용미술, 조형	15.6%	84.4%

아르코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 오픈 테이블 2차 성평등 팩트체크,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여성의 대표성 제고 시 고려할 조건

- 1) 경력 단절이 고용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 2) 대학 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낮지만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높음. 여성 일자리의 질의 문제.(공공기관 비정규직)
- 3) 정부위원회, 심사위원의 여성위원의 연령 낮음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보조사업 심사위원 여성 비율

- 2017년 31.9%
(신진 46.1%, 기존 39.8%)
- 2019년 39.1%
(신진 41.0%, 기존 28.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2019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단위: %)



[그림 58] 2019 지원분야별 여성 심의위원 비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2019, p.184.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계 의사결정구조의 특성에 따른 성 주류화 전략 필요

- 1) 문화예술계 의사결정권은 어떤 지위와 역할로 구성되는가?
분야별, 영역별 세분화된 지표 필요.
예) 지원사업 심사위원, 무용의 안무가, 연극의 연출가, 관현악단 지휘자 등
- 2)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지표 및 성인지 통계 구축 필요
- 3) 문화예술계 성차별 양상의 특성 파악 (영화현장의 성별 직무 분리 등)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정책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 1) 프리랜서 활동방식이 72%를 차지하는 조건
- 2)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기업 10인 이하 사업장 91.6%
- 3) 공적 의존도 높음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1) 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 2) 공공부문 지원사업 참여 기준 강화
- 3) 민간의 표준계약서(성폭력방지조항 추가) 사용 권장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화예술과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체성 :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1)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정책 : 공공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2) 성평등한 콘텐츠 창작과 비평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교육) 강화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성평등 문화정책의 주요 의제

- 의사 결정권자, 심사위원, 교육직 등의 성별 불평등 해소
-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성인지 비평 및 성평등 콘텐츠 창작 활성화
- 프리랜서 예술인의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공정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성폭력 사건해결 시스템 구축)
- 문화분야 성평등 지표 개발 및 성인지 통계자료 구축
- 예비 예술인과 직업적 예술인 정책의 통합적 접근
- 지역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성평등을 위한 미디어와 언론의 역할

II.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특수성과 조건

문체부 양성평등정책 사업

- 성평등정책 확산 전국 네트워크 지원 (포럼)
- 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성평등 교육(예방교육)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 및 피해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환경 통계조사 및 성폭력실태조사
- 문체부 위원회 및 본부와 산하 공공기관 여성 비율 제고
- 문화분야 성평등 지표 개발 (연구중)
- 양성평등 문화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중)

I.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문화예술 공공지원에서 성평등 적용 원칙과 방법론 가이드라인 제정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 Swedish Arts Grants Committee

성 주류화 원칙 적용을 위한 4가지 기준

1. 예술적 평가
2. 예술 전체, 장르별 성비를 고려한 예술적 평가
3. 예술인의 생활과 예술의 질 연관성을 고려한 평가
4. 비평적 성별 인식의 질을 고려한 평가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ㄱ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Sweden Arts Council (단체 지원)

규정 제3항: 성평등을 포함한 평등 관점을 적용하고 진흥해야 한다.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Sweden Arts Council

- 음악과 영화 등 성별 격차 현상이 큰 장르의 경우
집중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작곡가, 지휘자, 음악감독의 여성비율 10% 미만(2004)
→ 집중지원 10년 → 여성 비율 35%로 상향됨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단체지원금 신청서 Sweden Arts Council

- 단체 대표 및 모든 구성원의 성비, 직급별 성비, 특정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성비와 역할 명시
- 성평등 및 모든 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술
- 프로젝트 및 작업에 성평등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적용한 경우
- 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럼에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예술위원회 성평등교육 Sweden Arts Council

- 공공 기금과 보조금을 받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는
성평등 교육 “Green Card” 의무화 논의중

* 성평등 체크리스트

김혜인, 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영화위원회 Sweden Film Institute

2011년 여성 영화인 비율 26%

2016년 약 50%로 높아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스웨덴 영화위원회 성평등 프로그램 Sweden Film Institute

1. 여성 영화감독 홍보 웹사이트 구축
2. 경력자 여성감독 5인과 신인 여성감독 10인 매칭 멘토링
3. 펀딩 모니터링
4. 젊은 여성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및 영화학교, 영화제 등에서 평등 강화 프로젝트 기획
5. 영화 및 TV 프로듀서 조합과 리서치 프로젝트 진행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III. 성평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후 여성 감독, 작가, 프로듀서의 증가비율 스웨덴 영화위원회 Sweden Film Institute

구분	2016~2012년	2013~2016년
감독	29%	49%
작가	38%	44%
프로듀서	37%	54%
합계	35%	49%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p.63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통제받지 않는 권력, 지자체

시 의회의 견제 기능 약함

국회 지역구 의원의 역할 미미

지역문화재단의 관리감독 기관 = 지자체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정책 실행 요건

- 인력
- 예산
- 법률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특별시 사례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인권조례
-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조례 2016년 개정, 인권담당관에 신고)
-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범위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불교공뉴스, 2016.11.30.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 법적 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
- 여성사회교육기관 (사)여성사회교육원이 위탁 운영하며 센터장 포함 3팀 10명으로 구성
-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 피해 발생시 피해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 등 지원

김서현 기자,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개소, 여성신문, 2020.09.14.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서울시의 성평등 및 성폭력 근절 제도가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적용되는가?

미술계 Y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중요
= 지역 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추진주체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중앙부처와 지역문화재단의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

- 문체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역정책과)
- 아르코의 지역문화재단 참여 사업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IV.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방향

지역문화재단과 지자체의 민관 거버넌스 강화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자체 성평등정책 추진 및 정책 모니터링
- 현장 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의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
- 지역문화재단 이사회의 역할 필요

[토론문 1]

영화 분야에서의 성평등정책

주유신(영화진흥위원회 성평등위원, 영산대 교수)

□ 성평등영화정책의 배경

-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
“여성은 창의적 인재로서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경력 지속을 위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창의성은 성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맥락과 문제 속에 영향을 받는다.”
- 여성의 과소 대표성
- 한국 영화산업은 재현과 인력 구성 모두에서 성별이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
- 남성중심적 장르와 서사는 난무하는 반면 관습적인 여성 캐릭터 묘사와 부족한 여성 서사
- 최근 5년간 상업영화 여성 감독 비율 5~10%, 여성 스태프의 실질 임금이 남성 스태프의 40% 수준
- 여성 영화인의 경력 단계별 피라미드 구조(남성:여성)
- 대학 영화과 50:50
- 단편 영화 연출 70:30
- 독립 혹은 저예산 장편 영화 88:12
- 상업영화 95:5

□ 성평등영화정책의 진전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2018년 3월, ‘여성영화인모임’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지원으로 설립
- 영화계에 만연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지원
- 현장 영화인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및 성평등 실태 조사
-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 2018년 8월, 영진위 산하에 구성
- 한국 영화산업 내 성평등 기반 조성과 성평등 재현을 위한 한국 영화 지원 정책 개발
-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성비를 기존의 30% 이상에서 40~50%로 상향
- 영진위 모든 지원자들의 성비 관련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첫 번째 연구 프로젝트인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출간

□ 50:50 타깃제

- 남녀동수제(gender parity)
- 모든 시민은 성별에 상관없이 예술문화를 평등하고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문화 민주주의 혹은 문화 다양성에 근거
- 지금까지 예술문화산업이 남성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여성 혹은 여성의 이야기는 배제하여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안
- 타깃제는 쿼터제가 야기하는 게토화나 낙인을 피할 수 있고, 쿼터제보다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점
- 스웨덴
- 2013년 제작 지원에서 남녀 동수 달성
- 스크린 재현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결과 소재의 다양성 성취에 노력
- ‘5050 by 2020’ 캠페인
-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 참여
- 2020년까지 공적 기금 지원 성비 50:50 달성이 목표
- 영국: ‘다양성 기준’을 통해 여성 50% 뿐만 아니라 소수인종 20%, LGBT 9%, 장애인 7% 지원 의무화

□ 성평등정책의 의미

- 기회와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다양성 가치 실현
- 영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제공

공정(equity)을 넘어서 평등(equality)으로!

[토론문 2]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필요성

변현숙(변호사, 성평등문화증진분과 위원)

1. 문화예술계의 특징

문화예술계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성평등정책의 접근의 적용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계는 타 영역에 비해 분야에 진입 가능한 예비인력(잠재인력)중 여성의 비율이 어떤 타 영역보다 높은 영역이라는 점, 둘째 창의노동이라는 문화예술계 노동의 특수성, 프리랜서 중심의 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징은 개인의 커리어형성과정이 사적, 인적네트워크에 의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계의 성인지정도 및 의사 결정구조의 성 균형 정도가 개인의 커리어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한 노동구조를 스테레오 타입화 해온 특수성이 있는 점, 셋째 공공지원금 의존도가 타 사회영역보다 월등히 높은 분야로서 공공지원의 원칙과 결정의 파급이 크데, 이 공공지원의 의사결정주체의 성불균형성이나 공공지원 관련주체들의 젠더 감수성 정도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

2. 성평등 조례제정의 필요성

수많은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성평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고, 때로는 이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어 피해예술인에 대한 구제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에 예술인 복지법은 2018. 10. 16.자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마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 또한 기존의 형법이나 성폭력 성폭력특례법을 통해 처벌할 수도 있지만 기존 법률의 사각 지대에 있는 각종 성희롱, 이로 인한 피해 예술인의 불이익 등은 구제받지 못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실적인 문화예술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예술인의 구제 등을 위하여는 일선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가 제정되어 실시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제·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조례를 통한 자방자치단체의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시책만으로는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고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성평등 조례” 제정의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1) 김혜인, 이상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0~42

3. 다른 지자체의 조례 사례

번호	조례명	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5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권익보호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제2항 4호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계획의 수립) 제2항 3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4.] 제5조(사업) 제2항 4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신설 2019. 1. 14.]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4., 2019. 10. 01.>
3	대구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 3호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제1항 4호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4.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방향

부산에도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복지의 일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성폭력 및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행위자 공적지원 배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 2차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평등한 문화예술계 정착을 위한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조례”의 제정을 바란다.



[토론문 3]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 과제

이미연(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1.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발제1과2에서 제기된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 조성 과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어디까지로 규정할 수 있을까?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역할 중 핵심은 문화예술창작, 학예진흥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지역문화정체성 확립,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 기반조성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정책 연구, 콘텐츠 생산과 확장, 지자체 및 시의회와의 거버넌스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요구에 직면해있다고 하겠다. 특히 미투에서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민간과 지역문화재단을 아울러 성평등 문화정책의 필요성 대두, 문화예술계 성평등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제안, 중앙과 지역의 소통과 연대, 지역재단 내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구조 개선 등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부산문화재단 역시 2019년 2월 여성계, 여성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했다. 당시의 논의는 부산문화재단이 그동안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운영방식이나 태도에서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 앞으로 지역에서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문화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기반구축, 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정책 과제와 현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 기반·제도 개선

- 문화예술 성평등 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문화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 문화예술 반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 지원
- 심사·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비율 일정 할당
- 교부·계약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따른 서약서 필수 작성
- 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내규 마련

▪ 사업 운영

- 성평등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대응센터 상시 운영 적극 협조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별 규칙 제작 지원

▪ 재단 내부 지원 역량 강화

- 재단 내 성평등 문화정책·사업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 기반조성·사업·재단 인식개선 간 유기적 결합 방식 필요(유닛 운영 등)
- 직원 젠더감수성 강화 위한 실질적 교육 강화(문화예술계 실태위주)

2. 2020년 부산문화재단 성평등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2019년 제안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평등 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문화재단의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반·제도 개선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내 외부 전문가 참여 ‘문화정책위원회 성평등 증진분과’ 조직, 변정희 분과장을 중심으로 재단 성평등 정책 이행 관련 논의구조 마련.
- 문화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평가지표 개발 관련 정책연구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연구 추진, 여성가족 개발원 양성평등센터와 연계 평가지표 개발 추진 가능성.
- 문화예술 반성폭력 관련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소통, 구체화 계획 마련.
- 심사·자문위원 구성 시 여성 비율은 40% 이상 할당으로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으며 하반기 실제 심사위원 성별 비율 데이터를 조사해서 확인해 볼 계획임.
- 성폭력예방 등에 따른 서약서 작성은 진행되고 있고, 가해자 처벌은 가해 사실 확인되면 심의나 선정에서 배제하고 있음.

▪ 사업 운영

- 2019년 10월 영남권 성평등 정책 토론회 개최, 2010년 현 성평등 문화정책 토론회 개최
-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대응센터 상시 운영 관련 여성가족국 기관 등의 문제로 2020년 상반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내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내에서 지원할 예정임.
-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임. 현재 예술활동 증명자 6572명 중 여성 비율이 3764명임(57%). 성평등 문화확산 및 콘텐츠 제작은 예술지원팀과 문화공유팀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예술지원 체계 개선 용역을 작년에 추진해 21년부터 반영 예정으로 성평등 관점을 지원사업 체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별 규칙 제작 지원 관련 현재 문화공유팀의 문화다양성 사업 내에서 연극분야 ‘세이프 온 스테이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며, 11월 말 아시아문화다양성 포럼 커뮤니티 살롱 세션에서 완성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 (21년도에는 무용분야 규약제정 추진 예정)

▪ 재단 내부 지원 역량 강화

- 정책연구센터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추진 관련 담당자가 성평등증진 분과와 회의체 구성, 운영 중이며 재단 내부의 성인지갑수성 증진, 사업추진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2021년의 추진 과제로 올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기반구축, 조례 제정 지원을 위한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여성계가 성폭력예방특별기구 설치를 통한 부산시의 성폭력과 성주류화 정책 실행체계를 만들려고 노력 중, 이와 연계해서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정책 내용 구체화,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대응센터의 안정적 운영, 성평등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III. 문화정책위원회 전체 활동

Ⅲ. 문화정책위원회 전체 활동

1. 문화정책 열린포럼

- 일시 및 장소 : 2020. 10.28.
- 참석자 : 부산시민, 예술가, 부산문화재단 직원 등
- 내용
 - 코로나 시대, 한국 및 부산 문화예술분야의 변화 양상 및 문제점 점검
 - 부산 문화정책에 대한 영역별 변화 전략 제안

시간	세부 내용
14:00~14:05	[개회인사] - 강동수(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14:05~14:30	[기조발제] '코로나 시대, 한국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고민하다' - 김명곤(연극연출가, 전 문화부 장관)
14:30~15:50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주제발표] '코로나 시대, 부산 문화정책의 전환에 대하여' - 이지훈(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종합토론] 좌장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 토론 주제 - 시민 영역 : 코로나로 달라진 시민의 삶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정수진(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사회적가치실현분과 위원) - 예술창작 영역 : 예술의 형식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정책 심문섭(예술은 공유다 대표, 미래문화환경분과 위원장) - 예술인 영역 :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활동보장을 위한 문화정책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숲 대표, 예술지원정책분과 위원)
15:50~16:00	[폐회]

[발표문]

코로나 시대, 부산 문화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이지훈 (정책위원회 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개요]

- 공공 예술공간의 공공성 회복
 - 공공 예술공간의 지속적 운영
- 실질적인 예술가 지원
 - 예술가 직접 지원 강화
 - '과정 중심(연구, 기획)' 지원 보강
 - 부산형 예술인 기본수당 실험
- 비대면 온라인 문화의 중장기 육성
 - 지역 통합 플랫폼 구축
 - 예술인 대상 영상제작·유통 교육
 - 트랜스미디어 방식 제작
- 로컬-택트, 동네 문화
 - '동네 속으로' '친-관객'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앞으로의 과제
 - 문학, 미술 중심의 국제예술교류
 - 재단 적립금의 활용
 - 예술의 역할

1. 문화 기본권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아야

지난 2월 24일부터 공공 문화·예술공간은 정부 지시에 따라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고 있다.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의 말처럼 "일상의 붕괴가 공공적인 것의 빠른 폐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사건이다.²⁾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공 예술공간을 닫는 조치 때문에 시민들은 무력해지고, 예술가들은 치명상을 입었다.

방역을 위한 예술공간 폐쇄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최소한의 대책은 있어야 한다. 1983년부터 예술인 사회 보장을 지원하는 독일, 또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인 인터미텐스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을 오래전부터 시행한 프랑스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가령 미국 보스턴시는 "공연, 회의, 담론, 간담회 등 취소된 이벤트비용 전액 환급" "창작 작업과 관련된 출장 경비 환급"을 지원한다.³⁾ 공연, 전시를 준비한 예술가들을 위해 이 같은 최소한의 대책도 없이 무작정 공공 예술시설을

2) 「공동의 위기, 예술인의 몫은 존재하는가?」,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제3호, 2020, 3쪽

3) <https://www.boston.gov/news/boston-establishes-artist-relief-fund-response-coronavirus> 2020.6.4. 이 지원은 보스턴 Artist Relief 펀딩으로 운영된다.

폐쇄하고 보자는 식의 조치는 김상철의 말처럼 “공공적인 것의 후퇴”이자 “공공적인 것의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다.⁴⁾ 이 문제는 비단 예술인의 생계뿐 아니라 예술 활동 자체의 사활이 걸렸다.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니면 활용할 공간이 거의 없으므로 공공시설 폐쇄는 곧 예술 활동의 종단을 말한다. 지원 사업을 맡은 문화재단도 예술창작 지원을 넘어 무관중 운영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 향수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 상황에서 부산 예술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특히 예술인과 시민들은 민간시설은 놓아두고, 공공시설만을 닫는 정부 정책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질병 관리본부는 극장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수 민간 공연장은 마스크 착용, 문진표 작성, 극장 방역, 객석 띄어 앉기를 하며 운영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민간 공연장에서 객석 전염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처럼 공공 공연장을 닫아버리자 시민들이 이곳을 고위험 시설로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부정적 인식은 또한 민간 공연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옮겨갔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영역을 통제하기는 어려우니 공공 영역이라도 폐쇄하겠다는 뜻이었을까. 실질적 방역의 의미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도’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려는 조치였을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손쉽고, 안이한 결정 이었고, 그 대가는 너무도 컸다. 시민들에게 공연장은 국가가 금하는 곳, 위험한 곳이라는 부정적 시그널을 던졌다. 문제는 이 결정의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과 예술가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코로나19를 완전하게 퇴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뉴노멀’ 세계에 걸맞은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뉴노멀’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팬데믹 이후에도 공연을 계속한 민간 공연장에서 전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상당수 상업공연은 객석 거리두기 없이 공연을 진행했다. 이것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킬 때 공연장은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임상실험’ 결과다. 공연장은 대중교통, 대중식당과 마찬가지로 다중밀집공간이지만, 관람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면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⁵⁾

물론 이 ‘임상’ 결과가 공연장에서의 전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 수 없는 반면,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다면, 일상을 안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연장 또한 운영을 지속하면서도 전염병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지난 9개월처럼 전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무시로 공공 예술시설을 열고 닫는 것은 주먹구구식이고 소모적이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같은 문구가 장기적으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방역만큼이나 생계도 중요하고, 문화 기본권도 중요하다. 정부 당국은 눈앞의 숫자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여기에 문화예술인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요컨대 공공 예술시설을 지속적으로 열어야 한다. 공공시설이 술선해서 운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공공 시설이 앞장서서 문을 닫았지만 이제부터는 공공시설이 선도적으로 문을 열고, 관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부와 예술인들이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공연·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술의 사멸을 막기 바란다.

4) 김상철, 같은 글, 3쪽

5) 소극장 공연이 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며, 해당 극장이 며칠 닫힌 적이 있으나, 전염된 관객은 없었다. 또 뮤지컬 내한공연단 배우 두 명이 감염 확진되었지만 입국 이전에 감염된 경우였고, 해당 공연 관객을 전수 조사했으나 확진자는 없었다. 그리고 소극장 공연 준비 과정에 배우들이 확진 판정 받은 경우가 있으나, 개막 전 공연을 취소했기 때문에 관객 전염은 없었다.

2. 형식적 지원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예술의 사멸은 비유가 아니다. 예술계 내부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이탈자들이 속출한다. 여기에 정부나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 자체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술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다양한 풍요로움을 잃고, 삶을 고양시키는 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간접지원보다 직접지원의 비중이 커야 한다. 가령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마련한 3천469억 원 가운데 904억 원을 차지하는 ‘6대 분야 소비쿠폰’(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은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공공) 공연장을 수시로 닫고 ‘사실상’ 위험시설로 여기게 만든 상황에서 쿠폰 제공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현재 오프라인 공연을 지속하는 민간 공연장에는 직접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부산시는 1억 7천만 원을 마련해 ‘공연 예술 소극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포함되었다.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극장이 새 사업을 제안하고 이것을 선정, 지원하는 방식은 아쉽다. 지금처럼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활동 계획에 대해 지원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해오던 예술 활동(작품)을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이 필요하다.

가령 200석 규모의 소극장은 ‘거리두기 좌석제’로 70석 정도로 운영하는데, 그 좌석들이 매진되어도 더는 관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130석을 시가 구입해주면 어떨까. 130석의 구입이 어렵다면, 판매된 좌석 수에 비례해 차등 구입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소비 쿠폰, 방역 지원 같은 간접지원을 넘어 직접지원을 고려하자는 말이다. 한편 문화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칠까봐 우려스럽다. 지속 가능성 없는 일회성 일자리를 만들 어낼 뿐이라는 비판도 있고, 공모에서 작품 설치까지 5개월 ‘벼락치기’로 진행되는 것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지금 시기의 미술 지원을 공공미술로 한정할 것도 문제다.

오히려 작가들이 그동안 해오던 창작활동을 그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금처럼 예술 활동 자체가 정지된 시기에는 코로나 재난 이전에 이미 완성된 예술 활동 결과물을 구매해주는 것, 즉 작가들의 기존 작품을 구입해 주는 것도 좋다. 또 예술교육 강좌를 만들어 작가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사업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술가 지원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직접지원을 강화하고, 그와 함께 예술 지원체제도 보완해야 한다. ‘결과’ 중심 지원만이 아니라 ‘과정’(연구, 기획) 중심 지원도 강화하고, 공연장뿐 아니라 재택 작업(‘홈 레지던시’) 지원도 추가하며, 1년 단위를 넘어 2~3년 단위의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도 늘려야 한다. 이에 맞춰 지원과 공모 방식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점에서 부산형 예술인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한다. 서울문화재단이 실행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⁶⁾ 다만 부산의 경우, 연령대를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3. 비대면 영상문화의 이상과 현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비대면과 온라인 문화 확산’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공공 공연장, 미술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공공 예술 공간 폐쇄의 ‘면죄부’로 비대면 문화 활성화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전제로 하고, 비대면과 온라인 문화 확산을 생각해보자. 현재 비대면 문제에 관해 정책적 이상과 현장 상황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예술인 상당수가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예술가들에게 돌아올 몫이 크지 않다.

6) 2017년~2019년 3년 간 실행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은 예술인 기본소득 실험으로 볼 수 있다. 형식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지만, 1인당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단체 사업비로 최대 1500만원을 지급했다. 연 250명 내외를 선정했다. 지원 연령은 35세 이하로 제한되었다.

실제 아카이빙이나 디지털화 작업 대부분은 ‘용역 업체’ 외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둘째, 장르 특성도 있다. 가령 클래식음악을 온라인 무대로 바꾸면 관람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 대중성이 떨어지므로 유료화 전망도 밝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은 공연·전시장의 고유한 현장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극, 무용 공연과 미술전시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하나 같이 온라인화의 단점으로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든다. 이처럼 국·공립 예술단 소속이 아닌 예술가들 대부분은 온라인화에 위화감을 느끼고, 그것이 오히려 소수·다양성 예술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예술가는 장기적으로 온라인 문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파급력, 그리고 이에 연관된 시민 관객들의 요구를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정책의 측면과 현장 예술인의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보자.

1) 정책의 측면

정책 측면에서는 그 출발점이 <중간 단계> 지원·육성이라고 생각한다. 중간 단계는 ‘공동 플랫폼’ 구축과 ‘예술인력 영상제작·유통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부산 지역의 경우는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을 주축으로 하고 예술협회, 단체,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술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유통, 홍보하는 플랫폼이다. 나아가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예술채널을 개설하고, 예술교육 콘텐츠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은 아카이빙의 관점에서 시 지원 사업 결과를 비롯해 지역 예술 콘텐츠를 총괄 관리하고, 차후 예술 창작의 발판으로 삼게 해준다. 또 시민들이 지역 예술 활동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로 지역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소구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작·유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키틀러의 말처럼 그라모폰은 예술 공연에서 시각과 청각을 분리시키고, 청각 중심의 세계를 열었다.⁷⁾ 이 관점에서 오늘날 비대면 온라인 공연은 그라모폰이 분리한 시각과 청각을 재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때 재결합하는 시각 요소는 자연적 시각이 아니라, 영화처럼 편집된 영상이다. 이 영상은 또한 시청자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상호작용한다(잠재적으로는 실시간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이 점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은 기존의 공연 실행 중계·녹화가 아닌 제3의 콘텐츠, 새로운 감각 콘텐츠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런 영상물은 일반적인 영상 제작 기술만으로는 잘 만들어지기 어렵다. 지금-시대의 영상 언어와 함께 공연 내용의 깊은 이해, 그리고 예술적 표현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연예술에 폭넓은 소양의 있고, 해당 공연 내용을 잘 이해하는 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영상이 정교해지고, 심미성이 높아지며, 관람 몰입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제작·유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영상 교육을 통해 육성된 예술 인력이 온라인화 사업에 참여한다면, 이 사업이 예술 생태계에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예술인을 위한 영상 제작·유통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 예술 관련 학과들과 부산영상위원회, 그리고 공영 방송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현장 예술인의 측면

최근 부산 지역에는 공공 공연장 폐쇄 조치로 공연을 못하게 된 예술단체들이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시도하자, 시 당국이 중단시킨 사례가 몇 건 있었다. 시 당국이 내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영상제작 인력이 모이는 것도 전염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상제작 지원 예산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7) 프리드리히 키틀러 지음,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2019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9월부터 2020년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사업 실행 이전에 선정된 콘텐츠에 대해 무관중 공연, 온라인화 공연을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좌절하기 마련이다. 현장 상황이 이런데 온라인 공연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허한 담론이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로 예술인의 관점에서 온라인 문화 활성화를 생각해보려 한다. 기술적 측면은 앞서 말한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육성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므로, 더 다루지 않겠다. 여기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예술단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은 트랜스미디어 방식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트랜스미디어는 매체들 간의 콘텐츠가 맺는 관계에 관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말하기 전에 TV조선 ‘미스터트롯’ 현상부터 생각해보자. 주목할 점은 TV 프로그램의 성공을 오프라인 실제공연의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온라인 영상 시청자들이 이후에 직접 극장공연을 보러 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대형 방송국의 사례이지만, 영상 활용이 공연 자체 뿐 아니라 공연자 개인 브랜드(다큐멘터리 형식)와 공연 장소에 대한 마케팅 홍보와도 연결될 수 있어 영상 활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올해 유튜브에서 미국 브로드웨이 배우의 1인 뮤지컬 제작과정 영상의 조회가 수백만 회가 넘었고, 배우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다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처럼 예술가들이 개인별, 소그룹별로 영상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이후 공연장에서 만나는 방식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핵심은 트랜스미디어 방식이다. <어벤져스> 시리즈를 예로 들어보자. 과거의 멀티미디어나 OSMU에서는 한 이야기가 다른 매체들에서 반복된다. 반면 <어벤져스> 시리즈는 여러 매체의 내용이 반복되지 않는다. 22편의 영화 스토리는 독립적인데, 이들이 모여 상호영향을 주며 ‘전체 이야기’(mega story)를 구성해나간다. 관객들은 각 매체에 흩어진 조각들을 채집, 연결하고, 전체 스토리를 향한 거대한 여정에 참여하며 희열을 느낀다.

이와 같이 한 공연·전시와 그것을 구성하는 예술가와 관객들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기획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유통은 꼭 공연·전시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예술가의 주요 수입원은 강의, 강사료다. 예술가들도 개인 브랜딩과 마케팅 관점에서 영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된 기술 측면(에듀테크)에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국예술위원회는 ‘디지털 문화 네트워크’(Digital Culture Network)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운영했다. 2012년부터 문화예술계를 위한 디지털 R&D 펀드로 매년 총 700만 유로 규모의 53개의 프로젝트를 따로 지원해왔고, 예술가-기술자-연구자의 협업을 유도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향유와 접근성 제고에 노력했다. 현재는 이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테크챔피언’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⁸⁾ 또 영국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이 비디오, 오디오, 대화 형태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게 BBC 방송국과 협력을 맺어 기금과 기술을 제공한다.⁹⁾

부산시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온라인 문화 활성화를 생각하기 바란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의 2020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 사업 총예산은 7억 4천 2백만 원이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예술창작’ 예산은 2억 원을 차지 할 뿐이다. 또 10월부터 시행되는 해당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8) <https://www.artscouncil.org.uk/developing-digital-culture/digital-culture-network>
 9) <https://www.artscouncil.org.uk/covid-19/bbc-arts-collaboration>

4. 로컬-택트, 동네 문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이 변했고, ‘온라인, 집, 동네’가 새 의미를 얻었다. 소비 지표도 ‘홈 어라운드 소비’가 증가했다.¹⁰⁾ 소상공인 매출도 동네 상권 중심으로 회복되었다.¹¹⁾

이에 따라 동네 기반 서비스도 증가했다.¹²⁾ 여행 방식도 여러 지점을 순환하는 방식보다 한 지점에 머물며 깊이 있게 즐기는 경향이 커졌다.

이런 변화는 문화 창조·향유 방식 전반의 변화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를 문화정책도 반영해야 할 텐데, 여기에는 온라인문화 활성화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획력’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다.

먼저 규모와 내용의 측면에서는 국공립 극장이 자체 기획한 공연이 아닌 이상, 당분간은 대규모 편성 공연보다 소규모, 살롱 공연이 적절하다. 또 일반적인 ‘보여주기’ 식의 공연보다 관객중심의 공연, 이를테면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친-관객 프로그램의 구성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50명 이하의 ‘작은 단위’ 행사를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술 공연, 전시, 교육뿐 아니라 시 낭송, 글쓰기 강좌 같은 문학 모임, 인문학 모임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공간 측면에서 도보 10분, 집에서 반경 400~500m에 있는 근린 생활권(동네), 골목, 근린공원을 활용하는 문화 예술 정책을 요청한다. 작은 콘서트(음악, 연극, 춤 공연), 미술 전시, 시 낭송회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요컨대 코로나 시대의 ‘로컬-택트’ 경향은 ‘동네 속으로’ ‘친-관객’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듯하다.

5. 앞으로의 과제

1) 국제예술교류

부산은 유라시아 철도와 해양 교통의 핵심 링크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국제 항구 도시라는 점을 상기하자. 김희진(또따 또가 센터장)의 말처럼 부산은 ‘문화 부동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수 있는 도시다.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부동항, 자유로운 문화의 부동항이 되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 링크를 형성하고, 유라시아로 확장한다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해양의 관점에서 부산과 원산을 연결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며, 국제적으로 확장한다는 전망 속에서 교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제 예술교류는 전면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상황이 한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영화를 비롯해 문학, 미술은 다른 공연예술에 비해 국제교류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남북교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류를 위해 이동해야 할 인원이 많은 공연예술보다 영화, 문학, 미술 영역의 교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 간 북한에서 영화 제작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학과 미술 분야 교류가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3~4월, 유일하게 늘어난 소비 분야는 ‘홈 어라운드 소비’다. 집에서 500m 이내의 카드 결제는 8.0% 증가한 반면, 집에서 멀어질수록 소비가 떨어지고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카드 결제는 12.6% 감소했다. <조선일보> 2020.4.24.

11) 2020년 5월 소상공인 매출이 동네상권 중심으로 회복했다. <중앙일보> 2020.6.11. 동네상권은 전년 동기 대비 97%~99% 회복한 반면 다운타운, 대학가와 관광지는 매출 부진을 유지했다. 업종별로 인터넷쇼핑, 홈쇼핑 매출 증가와 더불어 매출증가 상위 10개 업종 중 자전거, 정육점, 주류전문점, 슈퍼마켓, 약국 등 동네업종이 절반을 차지했다.

12) 동네 주민 간 중고 직거래를 중개하는 당근마켓의 방문자 수가 급증했다. 일반기업도 동네 주민배달, 동네 맛집 추천, 동네상품 선물하기, 동네시장 배송 등 다양한 동네 기반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2) 재단 적립금의 활용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현재 부산시 예술계와 시민들이 처한 상황은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 변화 또한 절실하다. 이 같은 상황의 시급함을 고려할 때, 정책 변화에 따르는 비용을 국비와 시비에만 전적으로 기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적으로 재단 적립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재 부산 문화예술 생태계에 시급한 정책 사업을 재단이 앞장서서 계획하고, 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간다면 좋겠다.

3) 예술의 역할

독일 메르켈 수상은 지난 5월 9일 담화에서 “문화는 우선순위 목록에서 최상위에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문화는 우선순위 목록의 최하위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공공 예술 시설을 폐쇄하라는 일방적인 ‘명령’ 앞에서 공공 예술시설의 공공성과 시민사회가 축적한 문화적 역량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필자는 예술이 인간의 활동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화·예술이 평화 시기에만 향유되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예술은 오히려 위기의 시기에 인간의 존재 가치를 지탱해 주었다. 예술의 역할이 단지 위로와 치유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 특히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리두기’의 시대에 예술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올해 헝가리에서는 코로나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 그 공연 티켓을 예매한 관객들이 환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들을 고려한 행동이었다.¹³⁾ 이 운동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소식은 우리에게 부러움을 자아내는 한편, 그동안 우리에게 예술이 무엇이었는지, 예술이 과연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에 관한 자성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 관점에서 문화재단은 예술가와 시민들과 함께 오늘날 문화예술의 위기 상황을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기를 바란다.

13) <https://www.archyde.com/in-hungary-spectators-in-solidarity-with-the-artists-waive-the-reimbursement-of-their-seats/>



이지훈 위원장 주제발표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기조발제



[토론편 1]

코로나로 달라진 시민의 삶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정수진(사회적가치 확산 추진분과 위원,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고 있다. 일상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잠시 겪고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다.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적어도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지역의 역할, 시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듯 하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도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본질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자,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시점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행복지수와 관련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해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다. 분석을 보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세대 간 소통과 이해, 건강증진 및 치유,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갈등해소, 공동체 정신확산 및 사회자본의 확장, 국가이미지 제고 등 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추고 기다리던 공연이 취소되고 어울릴 축제가 사라지고 동네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을 때 시민들이 느낀 무력감은 단절이 아니었을까 싶다.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소외와 무력감을 해소하기 멈춤이 아니라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정수진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기획실장

그 첫 번째 흐름은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식이면 좋겠다. 지역의 예술가를 활용하고, 지역의 자원을 엮어내는 방식, 지역의 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를 활용해 지역민을 엮고, 큰 공간을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마다 작은 문화공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지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안이 필요하다. 소규모가 모이는 예술 활동,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야말로 문화의 토대를 다지는 전환이 될 것이다. 이 전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를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의 일상화'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향하는 정책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실행을 위한 사업 대부분은 시민이 주체가 아니라 접근성과 하드웨어 위주의 중심을 둔 현실이다. 목적은 참여형인데 내용은 수동적 향유를 지원하는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및 커뮤니티예술,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시민이 직접 만들고 누리는 시민문화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참여와 실천의 문화 ▲문화 다양성의 인정과 확산을 표방해 왔다. 올해 1월에는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정책의 기본 철학이자 실천규범으로서의 문화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총 10차례의 제정위원회 활동 및 12일간의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지난 9월 16일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제정했다.

오는 10월 29일 선포식을 앞둔 ‘부산시민 문화헌장’은 ‘전문’에서 문화가 우리 삶의 토대임과 부산시민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며 문화 주권을 실천하는 주체임을 선언하고, 13개의 ‘조문’에서 문화 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첫 번째 조문인 ‘시민문화권의 주체와 권리 보장’은 ‘모든 시민은 문화 창조의 주체로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코로나로 달라진 상황에서 시민문화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어야 하고 실행의 방식이어야 한다.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 가치는 사람과 생명의 존중, 상생과 현대의 정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관용, 공공선의 추구, 자연과의 상생이다. 시민공동체의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는 인문정신을 진흥하는 것 역시 문화의 사회적 역할로 규정한 문화헌장은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성이다. 취약계층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의 상황에서 누구나 소외를 경험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는 모두가 취약계층이고 불균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더 소외되고 더 배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토론문 2]

코로나 시대 : 예술의 형식 변화를 견인하는 문화정책

심문섭(외래문화환경준비분과 위원장, 예술은 공유다 대륙)

“재난상황에서도 예술가의 창의성 보호를 통한 예술형식의 긍정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문화정책과 시스템을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술과 기술 접목에 대한 고민과 강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예술 활동의 보장을 위해 유네스코는 2017년에 예술가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예술적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UNESCO, 2017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예술가들은 디지털기술과의 융합 등이 예술의 본질을 벗어나는 과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의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코로나의 위기를 문화예술환경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으로 인식하는 측면도 발견된다.

기회와 도전의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 환경이 지속되는 예술현장은 이미 새로운 창작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의 환경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지속 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 유통과 소비 변화에 맞춘 창작형식의 변화는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소비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기반을 둔 문화적 접근에 익숙해 있다. 전자책, 오디오북, 음악과 영화의 스트리밍, 게임, 음악과 연극 공연의 상연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새로운 소비습관은 아니며, 예술 영역의 디지털 기술과의 접근은 코로나와는 별개로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코로나는 소비의 영역에서 창작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예술가의 또 다른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환경 속 디지털 매체를 통한 예술소비가 실제 예술고객이 되거나 코로나 이후의 창작환경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정착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가의 창작환경과 공공기관의 수요개발은 민관의 역할에 따라 기존의 문화정책을 재배치하는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먼저 예술가들이 온라인 형식의 예술 콘텐츠를 만들게 될 때 철저하게 온라인 매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나 직접대면방식의 예술작품을 재현하는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온기를 줄 수 있는 예술적 기술을 실험하고 개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예술가 직접지원 뿐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접목하는 창작실험과 소비개발의 영역으로까지 선도적으로 정책 지원을 실천하여 기존의 지역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예술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민 문화향유에만 초점이 맞춰진 문화예술정책으로는 생산과 공급 중심의 예술가 직접 지원체계의 다변화 및 예술가의

디지털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연구, 실험, 창작의 위험부담을 예술가의 몫으로만 돌리는 기본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이 지점이 예술작품의 단순한 디지털화로 바라보지 않고,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온라인콘텐츠의 알고리즘과 논리에 따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인 것이다.



심문섭(예술은 공유다 대표)

지금의 과제들은 예술형식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촉매제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재 기술발전의 흐름에 발맞춘 문화정책과 대응들은 코로나 회복기가 다가오더라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또한 코로나 환경에 따른 디지털기술의 활용조치로 인해 문화의 다양성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동시에 예술인들에게 발견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과 지금까지 예술을 든든히 받쳐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길을 잃어가는 기술과 유통, 기획, 제작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창작환경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원금과 투자금 외 창작활동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술의 발전과 형식의 다양화는 예술가들만의 몫이 아님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3]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활동보장을 위한 문화정책

차재근(예술지원정책분과 위원, 문화소통단체 슝 대표)

코로나로 인한 기존 방식의 붕괴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방식은 창작지원, 예술인력지원, 예술향유지원, 공공예술지원, 교류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위주의 지원방식은 기존의 공연장, 전시장 위주의 실행 방식으로 코로나시대에서 실행하지 못하거나 온라인 중계형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1년이라는 한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지원은 예술가들의 충분한 상상력을 담보하기에는 짧은 시간으로 창작에 제한의 틀을 만들어 년내에 사업수행을 위한 창작을 해야 하는 헤프닝 아닌 헤프닝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예술장르의 특성을 지금처럼 사람들의 만남을 규제하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창작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발표 조차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지원 방식에서 창작환경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예술가의 완성된 작품만을 지원하는 창작지원 방식에서 창작을 할 수 있는 창작환경지원 방식으로 전환으로 지속적인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예술시장의 형성을 통한 예술인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수술에 가까운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원에 방식에서 만큼은 예술가가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하는 부분의 논쟁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사업자, 취약계층 등 모든 분야에 지원의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방식,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방식, 취약계층에게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술가에게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취약계층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지원 방식과 사업자의 사업개발을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형식이 얹혀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정책 전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을 틀을 깨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지원 방식이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토지가 없는 농부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합니다. 또한 씨앗, 모종 제공에서부터 농기계 무상대여, 면세유 제공 등이 있습니다.
 농협을 통한 농작물 정부우선구매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생활할 수 있는 주택임대, 1% 미만의 농부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연세가 들어 농사를 짓기 힘들 때에는 농지 임대부 대여를 통한 수익제공 농지 임대부 대출을 통한 노후 생활 안정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이 있는 이유는 농업이라는 영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 방식도 예술이라는 영역의 중요성을 알고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처럼 예술에 기초적인 창작이라는 생산 틀 안에서 생산에 필요한 부분과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지함이 만든 경고이자 재앙입니다. 하지만 예술가에게는 또 하나의 깨달음과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기대어 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지훈(필로아트랩 대표)



차재근(문화소통단체 숨 대표)

IV. 문화정책위원회의 성과와 전망

IV. 문화정책위원회의 성과와 전망

거버넌스 조직으로서의 첫 시도에 대한 성과와 전망

이지훈(정책위원장, 필로아트랩 대표)

부산문화재단이 내부 기구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함께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2009년 부산문화재단이 세워진 뒤로 부산 지역의 각종 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과 집행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관점에서 부산문화재단의 공로는 적지 않으며, 부산문화 '판'의 변화와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산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시행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의 일상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속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부산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문화정책, 그리고 이른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 창작과 향유를 보편적 기본권 차원에서 드높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유동적으로,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부산문화재단에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문화정책 연구·개발의 역량 강화에 있으며, 부산문화재단이 정책연구센터와 함께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문화정책과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총체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지역의 문화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면서도, 거창하게 말하면 동시대 인류 또는 전 지구적 상황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의 수립은 예술창작 활동에 버금가는 창의성과 통찰과 도전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런 뜻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정책연구센터의 연구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는 가고 역할, 말하자면 지역 문화 현장과 문화재단의 가고 역할을 한다. 정책위원회는 부산 문화전반을 살피며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의 개발을 제안하는 한편, 전문가의 시선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 관점에서 정책연구센터와 정책위원회의 동반 출범은 매우 뜻 깊은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산문화재단의 이런 선구적 시도에 주목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센터의 활동은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자평한다. 정책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영역의 분과들은 그동안 각자 영역의 고유한 안건을 상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결실은 지난 10월 두 차례의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성평등 문화증진' 분과 위원회는 문화계의 '미투'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의 성평등 문제를 시민들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공공 의제로 의제화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 노력은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시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며, 부산시 성평등 조례 구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가치' 분과 위원회는 부산 시민의 문화기본권을 증진하고, 부산 문화예술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린다는 관점에서 활동을 지속했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각종 축제를 비롯해 문화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중지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거대 축제'의 방향성을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게 하자는 안건을 의제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술지원 정책' 분과 위원회는 그동안 부산문화재단이 시행한 지원 사업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바람직한 지원 방식 개발을 모색했다. 이 논의 결과는 특히 '소액다건', 말하자면 '나눠주기' 식의 지원이 아닌 '다액

소건'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문화예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지원 정책' 분과 위원회는 기존의 문화예술 장르 구분을 재검토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장르를 재조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과 융합의 경향을 반영하는 정책 개발의 결실을 거두었다.

'미래 문화환경 준비' 분과 위원회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문화 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계속했고, 그 논의는 온라인 문화콘텐츠 개발 강화와 함께 '로컬-택트' 또는 '동네 문화예술'(지역 속으로 스며드는, 지역 근린 문화)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특히 온라인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인 직업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유통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정책, 또 부산지역 문화예술인이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시 산하 영상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킹 및 협업 체제' 구축이라는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 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책위원회가 정책연구센터의 동반자이자 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립 취지에서 볼 때 지난 한 해 정책위원회는 나름대로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책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의 개발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차후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의제화, 정책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위원회 또한 부산시의 문화 프로그램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을 것 같다. 지난 한 해가 '기초 공사'에 주력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과제 선정과 수행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한편 부산시 차원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연구와 논의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의 논의와 제안이 구체화 되고 정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 다른 영역도 모두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대면'과 '공유'를 본질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너무도 힘든 한 해였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닥친 위기를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이 다시 우뚝 일어서게 만드는 것 또한 정책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이 점에서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위원회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한 해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할 것을 다짐한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집단지성의 힘을 다시 기대하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일동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존재가치를 복기 해 본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운영 체제를 위해서는 ‘행정과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부산시 별도의 조직인 부산문화재단은 이제는 ‘재단-행정-문화예술인-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가야 할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활동이 바로 ‘함께하는 부산문화재단 만들기’를 위한 구심점인 것이다.

내부적으로 현안 사업과 업무량에 매몰되어 자칫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 외부의 정책 제언과 담론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격변의 시대에 재단 단독으로는 정책 방향을 결정짓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위원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 주었다. 예술지원 정책 분과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주었다. 사회적 가치 확산 분과는 ‘부산지역 사회 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사례를 함께 조사했으며, 성평등 문화증진 분과는 부산시의회와 공동 포럼을 통해 부산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끝으로 미래 문화환경 준비 분과는 2020년 갈무리를 위한 문화정책 열린 포럼 개최로 ‘코로나 시대, 부산 문화정책의 전환’을 함께 고민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명(mission)과 시대정신(zeitgeist)을 이끌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문화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정책 위원회는 문화예술이 지역의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적 어젠더를 설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 한해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은 지역 문화예술이지만 어려운 현실에서도 협력과 연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복원력(resilience)에 희망을 거는 메시지 역시 눈에 띄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각 분과별 정책위원회의 제언과 담론을 통한 헌신적인 집단지성의 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책적 실현으로 결실을 맺어 지역 문화예술에 단비를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2020년 결과보고서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0. 12. 31.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http://www.bscf.or.kr>

전화 051-745-7205~7(정책연구센터)



위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